

### 3. 99년 종합 실업대책의 내용 및 평가

#### □ 중기 실업대책의 방향 마련

종합적·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향후 3~4년간의 고실업 장기화에 대응

- (수립 배경) 98년도의 실업 대책은 대량실업 발생에 대한 긴급대책의 성격에 불과하여 고용 안정·창출 효과 부족, 시행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드러냄
  - 즉 사회안전망,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자 보호라는 사후적 관리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므로 실질적인 고용 안정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했음
  - 또한 공공근로사업 관리 미비, 직업훈련의 성과 미흡, 생활보호성 사회안전망 부족, 실업자 정보·전달체계 미비, 중·장기적인 비전 부재 등에 따른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도 발생
- (방향) 종합적·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향후 3~4년간의 고실업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함
  - 200만개 일자리 창출 및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2002년에 실업률을 5%대로 안정시키고 실업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과 실업대책 전달 체계를 완비한다는 목표를 제시함
  -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전략적인 고용창출 대책, 실업자 사회안전망 확충,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등을 설정함

#### □ 99년 종합 실업대책의 내용

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본 목표로 하면서, 직업훈련 체제 개편, 실업대책 전달체계 확립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를 꾀함

- (기본 방향) 실업대책의 초점을 '적극적 고용 창출'로 전환했으며 '실업대책의 효율성' 제고에 힘을 기울임

## 주요 경제 현안

- 99년에는 실업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내수 진작을 위한 거시정책, 고용 효과가 큰 지식기반 산업의 적극적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둠
- 한편 지금까지의 실업대책이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는 평가에 따라 직업훈련 개선, 노동시장 정보 구축 등의 효율성 제고책을 포함시킴

- (주요 내용)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본축으로 하면서 직업훈련 체제 개편, 실업정보 체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

- ▷일자리 창출 및 유지 ▷취업능력 제고 ▷사회안전망 확충 ▷실업대책 전달체계 확립 등 4개 분야로 구성됨
- 실업대책 예산은 실업자 생활보호에 6조 2,600억원,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1조 4,311억원 등 총 7조 6,911억원(전년 대비 35.7% 증가)을 책정

< 99년 종합 실업대책 사업의 주요 내용 >

일자리 창출·유지	취업능력 제고	사회안전망 확충	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
-적극적 거시경제정책 -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-SOC투자 확충·집행 -중소기업 경영 안정·창업 지원 -주택·건설 활성화 -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-해외취업 촉진 -고용안정노력 지원	-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로 개편 -‘신지식인’ 창출을 위한 훈련 -훈련의 효율성 제고	-실업급여 수혜 범위 확대 -공공근로사업 확대 -생활보호사업 강화 -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-민간의 실업자 돕기 사업 활성화	-직업안정망 확충 -고용안정정보망의 기능 강화 · 노동시장정보(LMI) 체계 구축 -실업대책 D/B 및 실업자 Profiling 체제 구축

### □ 99년 종합 실업대책의 평가와 과제

실효성은 제고될 것으로 보이나,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의 인력수요 창출 노력이 미흡. 고용창출의 구체적 대안 마련과 함께 교육시스템 구축 필요

- (평가) 이번 대책은 보다 체계적·종합적인 중기 대책으로서, 정책 실효성 제고에 역점을 둠. 그러나 실업 해소의 근본인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추가적 인력수요 창출 대책이 미흡함
- 금번 대책은 직업훈련체제 개편 및 실업대책 전달체계의 개선 등 실효성 측면에서 크게 보완됨

-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직업 안정망도 적정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함
  - 더불어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과 더불어 채용 장려금, 고용유지 지원금, 종업원 인수기업 지원금 등 고용안정 노력 지원도 일정 정도 확대됨
  - 반면 지식기반 산업 위주로의 지원·개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능력 제고와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었음
  - 또한 민간 기업의 신규 노동수요 창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·제시되지 못한 점은 보완되어야 할 과제임
  - 무엇보다도 고용증대 및 고용안정의 근간으로서 실업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임금체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평가됨
  - 또한 인력수요 창출의 근원인 민간 기업의 가동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음
- (과제) 실업대책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할 기본 정책들에 대한 고려, 지나친 낙관론 경계, 장기실업자·구조적 실업 해소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며, 지식기반 산업 위주의 직업훈련 및 재취업 촉진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**
- 노사문제는 실업대책과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노사갈등 완화를 위한 방안이 실업대책의 연계선상에서 제시되지 못함
  - 또한 현재 노사정위가 파국을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의 권한과 기능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음
  - 1/4분기 내지 상반기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실업률이 서서히 낮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이외에 별다른 추가 대책이 마련되지 못함
  - 장기실업자 누증, 노동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 문제에 대한 방안도 중장기적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
  - 한편 전략적 고용창출 방안으로 마련된 지식기반 산업 발전 지원, 직업훈련 과정 및 유망분야 확대 등의 구체적 대안 제시가 시급히 마련·진행되어야 하며, 기술·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시스템의 구축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

(민 주 홍 [jhmin@hri.co.kr](mailto:jhmin@hri.co.kr) ☎724-4014)